



한리일보와 제민일보·JIBS 공동 주관으로 31일 JIBS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 선거구 후보 초청 토론회에 앞서 무소속 박희수, 미래통합당 장성철,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정의당 고병수 후보(사진 왼쪽부터)가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 4·3특별법·국제자유도시 '네 탓' 공방

어제 4·15총선 제주시갑 후보 초청토론회  
 제2공항 등 지역현안 책임 놓고 치열한 설전



4·3희생자 배·보상을 골자로 한 4·3 특별법 개정안 국회 처리 지연과 중국자본 유입 및 난개발을 유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놓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제주시갑 후보들간 날 선 책임 공방전이 펼쳐졌다.

이와함께 제주 최대 갈등 현안인 제2공항 건설과 관련 '공론화'의 범주와 4·3배보상 방안을 놓고 설전이 오갔다.

한리일보와 제민일보·JIBS 공동 주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첫날인 31일 JIBS 스튜디오에서 제주시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 정의당 고병수 후보, 무소속 박희수 후보가 나와 100분 동안 격론을 벌였다.

최근 4·3희생자 추념일을 앞두고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 지연을 두고 여야권이 '네 탓' 책임 공방을 벌이며 선거 쟁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토론회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오갔다.

아권은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지 부족을 도마에 올리며 비판 공세를 펼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책임론을 꺼내며 임기내 국정과제인 4·3희생자 배·보상 약속 이행 강조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는 야당이 장외투쟁을 벌이면서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아 심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야당의 책임론을 꺼냈고,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는 민주당이 정부를 설득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정의당 고병수 후보도 민주당의 실질적인 노력 부족을 꼬집었으며, 무소속 박희수 후보는 여당의 무관심과 야당의 이념공세 탓이라고 진단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5월 법안 자동 폐기를 앞두고 있다.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가 총선 이후인 4월 말이나 5월 초에 열릴 예정이지만 4·3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처리하기에는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4·3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희생자에 대한 배상 문제다. 행안부는 그동안 사법부 권한 침해 우려 등을 고려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 없었음 경우 향후에도 4·3특별법 개정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제2공항 건설 공론화를 둘러싼 질문 공세는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에게 쏟아졌다.

무소속 박희수 후보는 장 후보가 2018년 도지사 후보 시절 도민 의견이 배제됐으며 제2공항 정책 결정 과정이 잘못됐다고 했지만 최근 제2공항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말을 바꿨다고 공격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도 가세해 "장 후보는 제주도 정책기획관으로 있으면서 제2공항 용역을 발주한 적 있으면서도 공론화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한편 1일 열리는 후보 초청 토론회는 제주시를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가 토론을 벌인다.

오은지·송은범기자

## 제주4·3 제72주년 특집 (상) 아직도 갈 길 먼 진상규명

### 추가 진상조사 성과... 과제도 산적

사건 발생 72주년 맞지만 진상규명 현재 진행형  
 행복인 피해 실태 규명 등 정부 관심·의지 절실

다시 4월이다. 이맘쯤 제주섬 곳곳은 동백꽃이 고운 꽃망울을 드러내는 계절이다. 그렇지만 제주사람들에게 4월은 먹먹하고 시리기만 하다. 한국 현대사 최대의 비극인 제주4·3의 아픔을 빼놓고 4월을 얘기할 수는 없다. 올해로 72주년을 맞았지만 제주 4·3사건의 아픔은 애기 동백꽃의 선연한 자태처럼 사람들의 가슴속에 박혀있다. 4·3의 완전한 해결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72주년을 맞는 4·3의 해결과제 들을 짚어본다.

4·3은 사건발생 70년을 훌쩍 넘겼지만 피해실태와 진상규명 등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때문에 그동안 유족과 도민사회에서는 추가 진상조사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 2003년 정부가 펴낸 '4·3진상조사보고서'의 근본적인 한계 때문이다.

정부 '진상보고서'는 4·3에 대해 총괄적인 접근에 중점을 두고 작성됐다. 그렇다보니 제주4·3사건의 총체적인 실체를 밝히는 데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 사건의 원인은 어느 정도 드러났으나 가장 중요한 성격과 책임 문제, 인적·물적 피해실태 등은 제대로 조명하지 못했다.

특히 마을별 피해실태나 개별 집단학살 등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서 사건의 실체접근에 한계를 드러냈다. 마을별 피해실태와 집단학살을 밝히는 일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더 나아가 4·3으로 인해 파괴된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가장 우선 시되어야 할 과제임은 물론이다. 일부에서 정부 '진상보고서'를 두고 '미완의 보고서'라는 지적을 했던 이유다.

그런 점에서 최근 제주4·3평화재단이 '추가진상조사보고서 1'를 통해 사각지대에 남아있던 4·3의 피해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은 진상규명 작업에 있어서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보고서는 4·3 당시 12개 읍면 165개 마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접근했다. 그동안 소홀히 다뤄졌던 군인·경찰·우익단체 등의 피해실태 등에 대해 그 실상을 드러내는 등 다각도의 접근이 이뤄졌다.

그럼에도 17년만에 '추가진상조사보고서'가 나왔음에도 여전히 많은 과제를 남겨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영문도 모른채 끌려가 사라진 행방불명인의 피해 실태는 이뤄지지 못하면서 유족들의 한으로 남아있다. 4·3유해발굴과 유적지 보



제주4·3 72주년을 앞두고 4·3평화공원 위령탑에 헌화된 국화. 강희만기자

전 정비사업도 유족들의 기대치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70주년 4·3 당시 여야 정치권이 떠들썩했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의지가 부끄러울 지경이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추가진상조사가 뒤따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심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4·3은 국가공권력의 잘못으로 막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한 사건이다. 그런만큼 결과해지 차원에서 정부가 나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윤형기자 yhle@ihalla.com

### "개학 추가 연기 불가피... 학부모께서 이해를"

문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 주제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학교 개학 추가 연기와 관련해 "전문가와 학부모 포함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결정"이라며 불편을 겪는 가정의 이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으로부터는 또다시 학

교 개학을 추가로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며 "학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학생들의 학습 계획뿐 아니라 부모들의 돌봄 부담도 커지겠지만 아이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지켜내고, 지역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열린 중대본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는 6일로 예정

된 초중고의 개학을 9일부터 온라인 개학으로 대체하고 등교는 연기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교육당국의 온라인 개학 준비와 관련해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지만, 최대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함께 늘어나는 해외 유입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와대·부미현기자

한리일보 창간 31주년을 축하합니다. [www.airport.co.kr](http://www.airport.co.kr)

## 대한민국 하늘길을 빛내다!

만남의 기대,  
 여행의 설렘이 시작되는 곳,  
 우리는 한국공항공사입니다.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무결점 스마트 공항을 만듭니다!

**KAC 한국공항공사**  
 KOREA AIRPORTS CORPORATION